

세계화와 한국국가의 성격 변화*

손호철**

- I. 문제제기
- II. 후발산업화와 발전국가 모델: 정치경제적 특성과 성공의 조건들
- III. 지구화와 발전국가 모델의 전환: 민주화와 자유화
- IV. 동남아의 민주화와 자유화, 그리고 선거민주주의의 확대
- V. 맺음말

5.16 쿠데타 이후 한국국가는 국가주도형 경제와 권위주의라는 두 특성을 갖는 발전국가내지 개발독재로 변모했다. 이 중 권위주의가 87년 민주화에 의해 해체되어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세계화, 특히 1997년 경제위기는 또 한번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국가주도형 발전국가가 해체되어 세계화와 시장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는 신자유주의를 그 중심적인 특징으로 하면서도 신국가주의, 신코포라티즘, 신공동체주의 등 모순되게 보이는 다양한 특성들을 혼합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대신 신자유주의정책 수행과정에서 부딪치는 노동자, 농민 등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화는 선진국에서 축적체제를 포드주의로부터 포스트포드주의로 전환시키면서 이에 조응하여 국가성격도 케인즈적 복지국가로부터 슈퍼터적 근로국가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가의 경우 원래 복지국가적 성격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리스트적 민족적 국가경쟁력 국가와 슈퍼터적 근로국가의 혼합형태였다. 그리고 세계화는 이러한 국가성격을 탈민족적 외자유치국가와 슈퍼

* 이 연구는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05-B00001).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교수.

터적 근로국가의 혼합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만큼 세계화는 한국국가의 계급적 기반의 중심축을 국내독점자본(재벌)으로부터 해외투기자본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주제어: 세계화,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 탈민족적 외자유치국가

I. 들어가며

21세기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경향과 화두는 세계화(지구화)¹⁾와 정보화이다. 물론 이 같은 경향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고, 그 함의는 무엇인가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Hardt & Negri; Balakrishnan; Held & McGrew; 손호철, 2004). 그러나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핵심적인 경향으로 부상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 글은 이 같은 경향과 관련하여 최근의 세계화·정보화 경향이 남북한의 국가 및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와 전망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공동 연구의 일부이다. 지금까지 세계화·정보화에 관한 연구들은 남한과 북한을 각각 별개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연구해왔지만, 세계화·정보화는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공통의 매개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전망하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세계화, 정보화의

1) 세계화와 지구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논의 참조.

흐름 중 세계화에 따라 남한의 국가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²⁾ 글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에서는 세계화에 관한 기존의 혼란스런 논의들을 정리하여 그 개념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후반부에서는 세계화가 한국의 국가성격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글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의 변화는 우선 국가의 탈중심성 경향 속에서의 국가의 기능변화³⁾, ‘탈국민적 자본유치 국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로의 국가성격의 변화이다.

II. 세계화의 개념과 내용⁴⁾

1. 세계화 개념

세계화, 지구화, 국제화 등의 개념들은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현실 경향을 지칭하는 개념과 ‘국가전략’ 내지 ‘정책’을 지칭하는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화, 지구화, 국제화는 ‘현실 경향’을 나타내지만, 김영삼정권에서 표방한 것과 같은 ‘세계화(Sekyehwa; Total Globalization Policy)’는 ‘국가전

2) 정보화가 한국의 국가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이다.

3) 이는 Held와 McGrew의 분류에 따르면 국가의 변형(transformation)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Held & McGrew, 1999)

4) 이 부분은 손호철,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향방”(손호철, 2002, 207-247)을 발전시킨 것이다.

략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 경향으로서의 세계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족국가에 기초한 발전 전략이다(대통령비서실, 1995; 임현진, 1995, 554). 또한 세계화와 지구화는 globalization이라는 동일 개념을 다르게 번역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계화와 지구화를 구별하는 논의들(조명래 1994; 임현진 1995)은 두 개념이 별개의 '현실 경향'을 지칭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경우 남는 쟁점은 '현실 경향으로서의 세계화/지구화(globalization)란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세계화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일반적인 개념화는 세계화와 국제화가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히 차별화하지 못하거나(Giddens, 1984; Robertson, 1992; Waters, 1995), 그 차이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파악하는 한계를 보인다(Held, 1991; Dicken, 1992). 국내 학계의 일부 논의에서도 이런 한계는 대체로 반복되고 있다(윤영관, 1995; 김성한, 1995).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연구(정진영, 1996)를 유추해석해보자면, 국제화와 세계화를 구별하는 기준은 '국가의 주권적 속성에 대한 변화'와 '인류는 하나라는 인식'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화는 1) 주권적 속성의 변화라는 현실 경향, 2) 그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개의 주객관적 요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질적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개념화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계화가 그 정의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속성의 변화, 즉 민족국가의 약화(극단적으로 소멸)를 의미하게 된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개념적 차원에서 이런 세계화 개념을 수용할지라도, 민족국가의 약화 여부는 구체적인 현실 분석을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로 남는다.

〈그림 1〉 국제화와 세계화(지구화)

상호의존	저 민족국가 중심성	고 탈중심성
현실 경향	국제화	세계화(지구화)
국가전략	세계화(Sekyehwa)	

2. 세계화의 내용

세계화의 내용에 있어서, 세계화 이론가들이 서술하는 세계화는 ① 소련·동구의 몰락에 따른 명실상부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출현, ② WTO체제로 상징되는 새로운 단계의 자본의 지구화, ③ 정보화혁명에 따른 시공간의 압축, ④ 환경 문제 등의 부상에 따른 인류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등 차원을 달리하는 복합적인 현상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손호철, 2002; 구범모 외, 1996).

요컨대 소련·동구의 몰락으로 세계가 자본주의로 ‘평천화’되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단일한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출범했으며(Blackburn, 1991),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다국적(multinational) 기업으로부터 특정한 국가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는 초국적(transnational) 기업으로의 전화(박길성 1995), 민족국가를 대신해 자본축적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절자로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등장 등 이른바 ‘자본의 지구화’에 돌입했고(McMichael & Myhre, 1990; Ross & Trachte, 1990), 유럽연합(EU)이라는 초국적 정치체제가 등장하고 국제연합(UN)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정부 수준의 국제조직, 엠네스티와 그린피스 같은 민간 수준의 초국적 조직들이 확산되면서 주요한 정치 활동의 단위가 민족국가를 넘어서고 있으며(김호기, 1995; 이호

근, 1994; Held, 1989; McGrew, 1982),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화·자동화가 국제화시대를 능가하는 시공간의 압축을 가져왔고(Harvey, 1989; McLuhan, 1966), 핵전쟁과 환경파괴 등 인류생존의 공동체적 운명과 상호의존성의 문제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새롭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Porter, 1991; 정수복, 1995).

그러나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서술되는 이상의 내용들은 민족국가의 약화·강화를 둘러싼 대립적인 입장들과 마찬가지로 ‘단절성’의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손호철, 2002, 234-238). 즉 세계화의 내용으로 언급되는 1980년대 이후의 변화들이 얼마나 단절적인 것인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을 형성한다.

우선 지성사적 입장에서 세계화 논의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세계화라는 문제의식은 이미 4백 년 전에 생겨났으며 1960년대 이후 수차례 논쟁이 되어왔다(Waters, 1995). 자본의 국제화만 하더라도 60년대 말-70년대 초 자본의 국제화와 민족국가의 향방을 놓고 벌어진 유명한 만델-머리-와렌의 논쟁(Mandel, 1967; Murray, 1971; Warren, 1971)에서부터 ‘좌초하의 주권(Sovereignty at Bay)’ 논쟁(Vernon, 1971; Barnet, 1974) 등이 존재했다. 이밖에 환경 문제 등 전지구적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화혁명에 의한 시공간의 압축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과정이다.

물론 경제 활동의 국제화를 둘러싼 논쟁의 경우, 무역개방도 등을 중심으로 경제통합도를 1910년대와 단순비교해서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상품교역 등 ‘유통의 국제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국제분업으로 표현되는 ‘생산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생산의 국제화는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의 변화가 이전 시기와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지는 입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이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논리, 즉 양이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양질변화론'으로 설명한다면 너무 부족한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세계화에 주목하는 경우에도(윤소영 1999), 최근 금융·외환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금융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지만 이 역시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금융자본의 승리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Sweezy, 1994), 대영제국의 헤게모니가 도전을 받기 시작하던 20세기 초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바 있으며(Hilferding, 1910), 결국 금융자본의 헤게모니는 과잉생산과 과잉투자에 따라 생산자본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로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초기부터 특정한 축적 주기가 쇠락할 때 나타난 주기적 현상이다(Arrighi, 1994).

또한 민족국가의 약화·소멸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에서 두 개의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과 화폐는 자본 그 자체에 의해 관리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조절이 없다면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박복영 ; de Brunhoff, 1981), 민족국가의 약화·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족국가를 대신하는 세계적 경제 조절이 무엇인가가 입증되어야 한다.⁵⁾ 더구나 엠마누엘이 비교생산비설을 비판할 때 지적했듯이,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생산요소 사이에는 유동성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Emmanuel, 1972). 자본은 국경을 넘어 지구화하고 있지만 노동은 여전히 국경에 묶여 있다. 물론 선진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정도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

5) 이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은 다양한 뛰어난 분석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측면이 많으며, 민족국가에 기초한 국지적 반세계화운동을 반동적인 것으로 기각하는 좌익 관념론이다(손호철, 2004).

지만(桑原晴夫 1991), ‘노동의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고 국제 이동의 노동력 역시 외국인노동자라는 국적에 묶여 있다. 국어라는 ‘민족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보혁명과 함께 문화의 세계화가 진전되어 민족문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민족적 정체성의 중요한 근원인 국어는 전혀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민족국가의 소멸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족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기능적 필요성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 국가전략의 산물이자 계급투쟁의 산물인 듯이(손호철, 2002, 209-215), 민족국가의 해체와 다른 형태의 국가로의 전화 문제는 계급투쟁 등 사회세력들의 실천과 전략에 의해 좌우되는 열려진 문제이다. 사실 지구화에 의해 낡은 제국주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제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도전적인 주장으로 각광을 받은 하트와 네그리(Hardt & Negri, 2000; 이를 둘러싼 논쟁은 Balakrishnan) 역시 최근 부시정부가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군사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전략을 펴나가자 미국이 ‘제국’이 아니라 낡은 제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분강개한 바 있다(손호철, 2004b).

이 모두를 고려할 때 긴 호흡의 역사적 시각에서 다양한 수준의 세계화를 구별하고, 이런 역사적 틀 속에서 현재의 세계화의 위상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역사유물론적 문제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세계화는 인류의 역사로서의 세계화, 자본주의의 역사로서의 세계화, 독점자본주의의 역사로서의 세계화, 그리고 최근의 세계화가 존재한다. 우선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가 세계화의 역사이다. 이를테면 일부 세계화론자들이 세계화의 특징으로 정보화혁명에 따른 시공간 압축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자체가 다양한 통신·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의 압축, 즉 세계화의 역사였다. 둘째 자본주의의 역사 그 자체도 또 다른 세계화의 역사였다. 세계체제론이 설득력 있

게 보여주었듯이, 자본주의는 초기부터 일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체제적인 것이었다(Wallerstein, 1974; Holloway, 1997). 셋째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세계화의 역사지만, 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를 통해 세계화를 다시 한차례 높은 수준으로 강화시켰다(Lenin, 1964). 넷째 1970년대 '국제화 논쟁'이 보여주듯이 1960년대 말 이후 가시화된 생산의 국제화와 신국제분업에 의한 세계화가 나타났으며, 최근의 세계화 경향이 그 연장선에 있는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인가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세계화 현상이 기본적으로 불균등 세계화(uneven globalization)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화의 불균등성은 우선 국가별,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Holm, 1995). 즉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제3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진행 속도의 불균등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효과의 불균등성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사회구성체가 해체되면서 선진국은 '초민족적(supranational)'으로 후진국은 '민족이하적(infranational)'으로 변모하여 양극화될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적이다(Balibar, 1993). 세계화는 과거 제3세계의 종속을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속을 의미하며, 지금이야말로 종속이론에 적합한 세계가 되었다는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의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Cardoso, 1993).⁶⁾ 더구나 불균등성은 국가별, 지역별만이 아니라 층위별로도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도 유럽연합이 경제적으로

6) 흔히 세계화에 따른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심화라는 주장은 기존에 '종속'이라 불려온 세계체제의 지배/종속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한다. 여기서 상호의존은 세계체제 내 구성부분들간의 상호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연관이 평등한 것인가 아니면 지배/종속관계로서 불평등한 것인가 하는 구조적 속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의존의 심화는 종속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종속의 심화를 의미할 수 있다(손호철, 1991).

는 '거인', 정치적으로는 '난장이', 군사적으로는 '벌레' 수준이라는 한 각료의 자평이 이를 시사한다. 나아가 불균등성은 계급별, 계층별로도 다르게 진행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화 경향이 그 이전의 국제화와 질적으로 단절된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균등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세계화 개념과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질적 차별성과 단절성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가 이미 하나의 '현실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반경향'도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향방은 결국 사회세력들간 역관계와 투쟁, 전략의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세계화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결국 세계화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from-above)'와 민중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from-below)'가 존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 주도의 세계화의 미래상은 "구매력이 있는 자들을 위한 동질화된 슈퍼마켓으로서의 세계"이며 구매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경찰과 유사-군사적 내지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배제되고 필요한 만큼은 억압되는" 세계화이다. 문화적으로도 이는 "새로운 지구적 미국화"에 불과하다(Jameson, 1991). 따라서 자본 주도의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지구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리바이어던'(Ross & Trachte, 1990)에 비판을 가하고 저항하면서, 다양한 민주세력과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의해 버림받을 소외세력을 전세계적으로 조직하여 연대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투쟁해나가야 한다.⁷⁾ 또한 국가의 성격변화 논쟁도 이제는 강화/약화를 넘어서

7) 그 대표적인 예인 시애틀 투쟁에 대해서는 Thomas(2000),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에 대해서는 Gordon & Tumer(2000) 참조.

그 기능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Held & McGrew, 1999).

III. 세계화 이후의 국가성격

1. 세계화 이전의 국가성격

제3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은 국가의 과대성장성과 중심성이다. 식민지의 역사적 유산에 따른 국가장치의 과대성장, 경제적 토대와 사회계급의 미성숙에 따른 국가중심성 등 국가가 사회에 비해 과대성장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Alavi, 1973; Saul, 1974, 349-372).⁸⁾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후발산업국가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식민지 조선의 '초과대성장 국가장치'를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해방 직후 미군정의 억압적 국가장치를 통한 반혁명 전략과 일제 재산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 등 자본축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중심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이 주도한 국가주도형 산업화의 결과로 생겨난 종속적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변종인 '발전국가(development state)'는 국가 중심성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즉, 5.16쿠데타와 함께 권위주의적인 발전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주도형 산업화라는 '1961년' 체제가 성립되어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본틀을 구성해 왔다.⁹⁾

8) 물론 이것이 고추상성의 토대, 상부구조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의 과대성장성도 토대, 상부구조 수준에서는 하나의 기능적 정합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중심성, 과대성장성은 국가기구와 같이 보다 추상성이 낮은 수준에서의 이야기이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손호철,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참조(손호철, 1999).

하지만 이런 경향은 1980년대 이후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민사회 내 민중 부문의 성장에 따른 민주화(권위주의의 해체)이며, 다른 하나는 지구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른 정치경제적 전환(탈발전국가)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시민사회의 밀도를 강화시켜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데(Ruescheymer, 1992),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주도형 산업화는 시민사회, 특히 재벌과 이에 대립하는 노동자계급 등 민중 부문의 성장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국가중심성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나아가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화의 물결은 반민주적 종속파시즘 체제를 해체시켰고, '문민정부' 시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정치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박정희정권 말기에 중화학공업의 과잉투자에 의한 공황과 제2차 석유파동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잠시 선을 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전두환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경제자유화가 가속화되어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손호철, 1993).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권을 거치면서 점점 강화되었으며, 특히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김영삼정권이 기획한 '세계화' 전략을 통해 질적으로 도약한 후, 결국 1997년 경제 위기로 귀결했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정권은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발전주의라는 낡은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최악의 조합'이었으며, IMF 위기는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중첩된 결과였다(손호철, 1999).

97년 금융·외환 위기로 촉발된 IMF 관리체제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확대되어온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와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지배적인 틀로서 자리잡는 계기로 작동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의 정치경제적 전환의 핵심은 기존의 국가주도형 산업화 모형인 '발전국가'와 '종속적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완전한 해체이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부응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유연 축적에 의존하는 '종속적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종속적 포스트포드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다(김세균, 1997, 1998; 손호철, 1999, 160). 이런 전환은 복지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실업의 고통이 노동자·여성·장애인에게 집중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야기했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도 기존의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손호철, 1996),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임민주주의(delegate democracy)'(O'Donnell, 1994), 전근대적인 정당체계(지역정당체계)와 정당구조(사당체제), 정경유착, 대외적 종속성 등을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은 바 있다. 이후 정권재창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국민경선제 등에 의해 정당구조의 민주화 등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애들이 생겨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국가성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국가성격의 변화는 국가의 중심성과 그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통상 신자유주의는 작은 국가, 다시 말해 국가의 축소를 지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통념은 신화에 가깝다. 물론 신자유

주의가 민영화, 탈규제, 복지 기능의 축소 등을 통해 국가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국가의 규제 강화를 추구하고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처럼 '강한 국가'를 지향하기도 한다(Jessop, 1984).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축소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 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대중정권이 '작은 정부론'을 표방하고, 조폐공사 매각, 철도 민영화, 한전 해외 매각 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되기도 했지만, 서구의 사회적 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를 모방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보이듯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관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국가주의' 내지 '조합주의적 변형'에 가깝다(Jessop, 1994). 요컨대 순수한 시장경제와 야경국가는 신화에 불과하고 국가의 개입이나 조절이 없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위자 수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볼 경우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중심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본질적 차원의 '국가중심성'을 전제로 한 보다 낮은 추상성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세계화가 한국국가의 중심적인 특징이었던 '국가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의 43%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아래 참조)에서 자본축적과정과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화하지만, 이 같은 것이 단순한 국가의 기능축소가 아닌 기능변화를 의미하며,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기능변화는 흔히 '케인즈적 복지 국민국가(KWSN; 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에서 '슈페터적 근로 탈국민체제(SWPR; 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로의 전환으로 개념화되곤 한다(Jessop, 1994, 2002). 요컨대 케인즈적 복지 국민국가가 ① 비교적 폐쇄적인 일국적 경제에서 완전고용을 위해 수요를 관리하는 케인즈주의, ②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위해 경제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노동력 재생산에서의 복지, ③ 국민적 영토국가가 복지정책의 발전과 지도를 책임지는 국민적 성격, ④ 국가제도가 시장 실패의 주요한 보완물인 국가적 성격을 나타낸다면, 스펀터적 근로 탈국민체제는 ① 개방경제에서 혁신과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급을 관리하는 스펀터주의, ② 사회복지정책을 노동시장 유연성의 요구와 경제적 경쟁에 종속시키는 근로체제, ③ 일국적 영토국가를 벗어나는 탈국민적 성격, ④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비국가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체제를 나타낸다(Jessop, 2000, 22-24; 2002, 59, 252).

이런 개념화는 본래 서구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생겨난 것이란 점에서 수긍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의 기능이란 면에서 한국의 독특성은 '복지국가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오페식으로 표현하자면(Offe, 1984), 한국국가는 원래 예전부터 상징조작 이외에는 물질적 복지 등을 통한 '정당화' 기능은 거의 없이 '자본축적' 기능만을 수행해왔다. 굳이 복지제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고도성장에 따른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고용이었지만, 그나마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성을 도입하여 복지 기능은 더욱 악화되었다. 물론 김대중 정부시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표방하고 실업기금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등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2001년에도 8.7%에 불과하여 대표적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국가들의 1998년 평균인 26.36%에도 훨씬 못 미친다(손호철, 2005). 따라서 일정한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은 (국가가 후원하는) 복지 '국가'도 아니며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 '사회'도 아니다"

는 지적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고세훈, 2003, 102).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의 부재와 정리해고 및 실업의 일상화라는 최악의 조합, 즉 동아시아 모델과 서구 모델의 나쁜 점만을 조합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 '케인즈적 복지 국민국가'에서 '슈페터적 근로 탈국민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적이기는 하지만) 탈민족적이지는 않은 (종속적) '슈페터적 근로 국민국가'에서 '탈민족적 자본유치국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핵심인 슈페터적 근로국가는 탈국민적 성격만 제외했을 경우 박정희식 '발전주의'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런 국가주도형 산업화 모델이 해체되고 '종속적 신자본주의'가 지배적인 모델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Rosenvaig, 1997). 또는 과거의 국가가 '슈페터적 (민족적) 경쟁력국가'¹⁰⁾였다면 이제는 선진국과의 경쟁은 포기하고 선진국 금융자본의 하위파트너로 편입하는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변모하고 있다(사실 노무현정부 인수위 시절 인수위 내에서는 동북아중심국가를 금융자본 위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와 함께 첨단 산업을 결합시켜 지원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중 후자의 입장은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 이외에 슈페터적 경쟁력국가를 결합하고자 한 생각이었다). 이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한국국가가 그 이익을 대변해온 국내 독점자본, 즉 재벌과 해외 독점자본 중 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이들의 이익을 과거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자본의 국적에 상관없이 어떤 자본이든 최대한 유치하여 국내의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탈민족적 자본유치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이에 대해서는 Jessop(2002) 참조.

(김세균, 1998, 75). 김대중정권의 '외채도입론'이나 노무현정권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은 모두 이를 지칭한다. 그 단적인 예가 외국인 주식 소유 비율의 엄청난 상승이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6월에 3.77%였던 외국인 주식 소유는 2004년 5월 말 43.7%까지 상승하여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표 1 참조).

〈표 1〉 외국인 주식 소유 변동

98. 6	98. 11	99. 12	2000. 12	2001. 11	2002. 12	2003. 12	2004. 5.
3.77	10.86	21.8	30.1	36.9	36.0	40.1	43.7

*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중 외국인 보유 비율(%).

**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현황」(각 해당 연월).

물론 과거에도 한국의 국가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서 국내 독점자본의 이익만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과 선진 독점자본의 이해 역시 대변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이제 세계자본주의 체제, 특히 초국적 자본에 대한 구조적 종속이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이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경우 최소한 자본의 경영권 통제라는 면에서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비교 제 3 세계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었다면 불과 5-6년 사이에 한국은 이면에서도 가장 종속적인 국가로 되고 말았다.

세계화 이후 한국국가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격화를 관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등장이다. 물론 과거에도 국가장치의 과대성장이나 중심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예외국가의 일상화'로서 억압성의 제도화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흔히 군사독재 내지 권위주의로 지칭되는 이런 억압성에 대해서는 해외 독점자본과 외향적 현지 자본, 국가간의 삼각동맹을 통해 종속적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관료적 권위주의'라는 시각(한상진, 1988)부터, 단순한 권위주의를 넘어 '독점자본을 위한 정치적 반동화'로서 종속적 파시즘이라는 보다 급진적인 주장(김세균, 1991)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런 억압성이 87년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일정하게 완화되면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단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낙관론까지 제기된 적도 있다(Mainwiring, 1992; 임혁백, 1997; 조효래, 1997).

심지어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초의 '수식어 없는' 민주정부"라는 찬사까지 개진되기도 했지만(정대화, 1998), 한국 국가의 현실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다. 앞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는 일반적인 인식을 훨씬 뛰어넘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니계수가 IMF 이전에는 0.291 수준이었던 것이 김대중정부 시기에 0.312-0.320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0.298에서 무려 0.358로 빈부격차의 심화 정도는 훨씬 악화됐다(손호철, 2005, 218, <표 2> 참조). 그리고 이는 미국,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들보다 악화된 것이다(<표 3> 참조).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도 김대중정부 이전의 45% 수준에서 김대중정부 시기에 52% 선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비정규직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 58.4%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사회 지표 변화

연도	지니계수(I)	지니계수(II)	비정규직노동자비율(%)	절대빈곤지수(%)	상대빈곤지수(%)
1990	0.295		45.8		
1991	0.287		44.5		
1992	0.284		42.6		
1993	0.281		41.1		
1994	0.285		42.1		
1995	0.284		41.9		
1996	0.291	0.298	43.2	5.91	7.65
1997	0.283		45.7		
1998	0.316		46.9		
1999	0.320		51.6		
2000	0.317	0.358	52.1(58.4)	11.46	11.53
2001	0.319		50.1		
2002	0.312		51.6		

- * 지니계수(I), 비정규직노동자비율은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3)』 참조, 나머지는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정책포럼 167호(2003년 5월).
- ** 비정규직비율은 임시근로자(1년 미만 계약)수+일용노동자수/임금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한 반면 괄호속 수치는 통계청이 2000년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파견, 용역 등을 추가로 조사한, 비정규직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조사로 일반수치보다 정확한 것이다.
- *** 지니계수(II)는 도시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지니계수(III)는 국제비교를 위해 OECD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1인 가구 및 자영업가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다 과학적인 불평등지수이다. 단 지니계수(III)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상대빈곤지수는 전체가구 중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절대빈곤율은 전체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문제는 동일하다(〈표 3〉 참조).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2000년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지니계수가 0.239, 대표적인 보수

주의 국가들의 경우 0.267, 대표적인 (신)자유주의국가들의 경우 0.339를 기록한 반면, 한국의 경우 김대중정부 이전인 199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중간수준인 0.298을 기록했다가 2000년에는 미국,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국가들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각한 0.358을 기록했다. 이는 김대중정부 시기의 빈부격차가 영국,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국가들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빈부격차의 수준 못지않게 충격적인 것은 빈부격차의 심화 속도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빈부격차의 심화 추세를 보면 사민주의 국가들과 보수주의 국가들의 경우 지니계수가 각각 0.0004 증가에 그친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은 무려 0.032나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니계수가 불과 4년 동안(절반의 기간 동안)에 무려 0.060(자유주의의 두 배)이나 높아져서,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미국, 영국보다도 4배나 빠른 속도로 빈부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호철, 2005, 220).

〈표 3〉 소득불평등도(GINI)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

	국가	1987년(a)	1996년(b)	2000년(c)	변화(b-a 또는 c-b)
사민주의	스웨덴	0.218	0.211		+0.003
	노르웨이	0.233	0.238		+0.005
	덴마크	0.254	0.257		+0.003
	평균	0.235	0.239		+0.004
보수주의	프랑스	0.287	0.288		+0.001
	네덜란드	0.256	0.253		+0.003
	독일	0.247	0.261		+0.014
	평균	0.263	0.267		+0.004

자유주의	영국	0.303	0.344		+0.041
	미국	0.335	0.368		+0.033
	캐나다	0.283	0.305		+0.018
	평균	0.307	0.339		+0.032
	한국		0.298	0.358	+0.060

- *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정책포럼 167호(2003년 5월), 9쪽에서 재작성.
- ** (a)의 경우 프랑스·독일은 1989년, 영국·미국은 1986년 수치이고 (b)의 경우 스웨덴·영국은 1995년, 네덜란드·프랑스·독일은 1994년, 덴마크는 1997년, 캐나다는 1998년, 미국은 2000년 수치임.

이와 같은 빈부격차의 심화는 마치 사회적 양극화를 예견한 맑스의 『공산당 선언』이 영국 헤게모니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예상하고 쓴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이런 사회적 양극화가 하위 계급·계층의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국가는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해 한층 더 강력하고 억압적인 공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면모는 이미 김대중정부가 2000년 롯데 사태, 2001년 대우자동차 농성장의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증명해보인 바 있으며, 최근 국가폭력의 문제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이 같은 경찰국가적 특성은 이후 노사분규가 가라앉으면서 어느 정도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들어 철도 파업,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에 대한 강경대응이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갈등을 가속화시키는 한 항상 국가성격 속에 내장되어 있다가 수시로 전면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가 한국의 국가성격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정권이나, 아니면 신관치경제 정권이나는 논쟁이다. 학계, 특히 비판적 학계와 사회운동진영은 이들 정권들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이들 정권과 정권참여학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임혁백, 2000), 또 한나라당과 같은 야당도 이들을 신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넓은 의미의 신자유주의, 내지 스펙터적 근로국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신자유주의, 신코포러티즘, 신국가주의, 신공동체주의 같은 다양한 전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주장이다(Jessop, 1994; Jessop, 2002). 즉,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국가성격 변화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신코포러티즘, 신국가주의적 전략을 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조응하는 전략들(Jessop, 2002, 262)

	B. JESSOP	한국의 사례
신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화(자유경쟁의 촉진) · 탈규제(법과 국가의 역할 감소) · 사유화(공적 부문의 매각) · 간여 공적 부문의 시장 대리 · 국제화(교역과 투자의 자유) · 낮은 직접세(소비자 선택의 증대) 	<p>노동의 유연화 탈규제 공기업 사유화</p>
신코포러티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과 협력의 재균형 · 탈중심화된 '조절된 자기-조절' · 광범위의 사적·공적 '이해관계자들' · 공적·사적 파트너십의 역할 증대 · 개방경제지만 핵심 경제 부문의 보호 · 사회적 투자 재원을 위한 높은 세율 	<p>노사정위원회</p>
신국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제에서 조절된 경쟁으로 · 하향식 계획보다는 국가전략을 통한 지도 · 사적·공적 부문들의 행위에 대한 감사 · 공적·사적 파트너십에 대한 국가 지도 · 핵심 경제의 신중상주의적 보호 · 새로운 집합자원들을 위한 역할 증대 	<p>공적자금</p>

신공동체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자유화(자유경쟁의 제한) · 권력형성(제3부문의 역할 확장) · 사회화(사회적 경제의 확대) · 사회적 사용가치와 사회적 응집력에 대한 강조 · 자유 교역이 아닌 공정 교역(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 세금의 재배치(시민의 임금, 경력자의 수당) 	국민연금확대
--------	--	--------

IV.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화, 정보화가 남북한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큰 주제와 관련해 세계화가 남한의 국가성격 변화에 끼친 영향을 세계화와 의미, 세계화 이전의 한국국가의 성격, 세계화 이후의 한국국가성격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국가의 특징이었던 발전국가적 국가중심성이 세계화에 의해 약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약화가 아니라 기능변화의 성격이 강하며 그 기능변화라는 면에서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결과는 세계화가 남한의 시민사회에 끼친 영향,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에 끼친 영향, 나아가 북한의 국가, 시민사회,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세훈. 2003.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부.

- 구범모 외. 1996. 『세계화와 민족문화의 발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구춘권. 2000.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책세상.
- 김성한.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김세균. 1991.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비평』 6호.
- _____. 1997.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 『현장에서 미래를』 24호(8월).
- _____. 1998.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 김호기. 1995.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위상”,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대통령비서실. 1995. 『대통령의 세계화구상』 (1월 25일).
- 박길성. “근대성에서 세계성으로”,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손호철. 1991. “페레스트로이카 제3세계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 _____. 1993.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발전”, 『전환기의 한국정치』, 창작과 비평.
- _____. 1996. “김영삼정권의 국가성격”,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 _____. 1999.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_____. 2002. 『근대와 탈근대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 _____. 2004. “반세계화(지구화) 투쟁은 역사적 반동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한울.
- _____. 2005.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9: 1
- 윤영관. 1995. “세계화: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윤소영. 1999.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 공감.
- 이호근. 1994. “지구화, 유럽통합,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 『반시대』 창간호.
- 임혁백. 1997. “자연되고 있는 한국의 공고화”, 최장집·임현진 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한국 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나남.
- 임혁백. 2000. “신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제 3의 길?” 『계간 다리』 여름.

- 임현진. 1995. "지구시대 한국의 진로",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정대화. 1998. "김대중 정부의 성격과 과제, 개혁/진보세력의 역할", 『경제와 사회』 (봄), 사회비평사.
- 정수복. "지구 환경위기와 국제 환경정치",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 정진영. 1996. "세계화: 개념적, 이론적 분석",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종연구소.
- 조명래. 1994. "지구화의 의미와 본질", 『공간과 사회』 4호.
- 조효래. 1997.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 한국과 브라질, 에스파냐의 비교』, 사회비평사.
- 한상진. 1988.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문학과 지성사.
- 桑原晴夫. 1991. 『國境越える労働者』, 東京.
- Alavi, Hamza. 1973.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in K. Gough ed., *Imperialism and Revolution in South Asia*, NY: Monthly Review.
- Arrighi Giovanni.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London: Verso.
- Balakrishnan, Gopal. 2003. *Debaing Empire*, London: Verso.
- Balibar, Etienne. 1993. "민족형태에 대하여", 윤소영 편,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이론.
- Barnet, Richarrd et al. 1974. *Global Reach*, NY: Simon & Schuster.
- de Brunhoff, Susan. 1981. *State and Economic Policy*, London: Polity Press.
- Cardoso, Fernando. 1993. "North-South Relations in the Present Context: A New Dependency," in M. Carnoy et al, eds., *The New Global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 Press, 1993.
- Dicken, Peter. 1992. *Global Shif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London: Paul Chapman Pub.
- Emmanuel, Arghiri. 1972. *Unequal Exchange*, NY: Monthly Review.
- Falk, Richard. 1993. "The Making of Global Citizenship," in J. Brecher et al. *Global Visions: Beyond the New World Order*, South End Press.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Gorden, Michel & Lowell Turner eds. 2000. *Transnational Cooperation among Labor Leade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1989. *The Conditions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Held, David, 1989. "The Decline of the Nation-State," in Stuart Hall et al., *New Times*, London: Verso.
- _____. 1991. "Democracy, the Nation-State, and the Global System," *Economy & Society*, 20:2(May)
- _____ et al. 1999. *Global Transformations*, Standford University Press.
- _____ & Anthony McGrew eds. 2000. *The Global Transformation Reader*, London: Polity Press.
- _____ & Anthony McGrew eds. 2000.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London: Polity Press.
- _____ & Anthony McGrew eds. 2002. *Governing Globalization*, London: Polity Press.
- Hilferding, Rudolf. 1910. *Finance Capita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1981).
- Hirst, Paul & Grahame Thompson, 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London: Polity Press.
- Holm, Hans-Henrik, 1995. *Whose World Order: Uneven Global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Boulder: Westview.
- Holloway, John, 1997. "Global Capital and Nation State," in *The Politics of Money*, Routledge.
- Jameson, Fredric. 1991. "Conversation on the New World Order," in *After the Fall*, London: Verso.
- Jessop, Bob, 1984. "Authoritarian Populism: Two Nations and Thatcherism", *New Left Review*, September/October.
- _____. 1993. *The Capitalist State*: London: Polity
- _____. 1994. "The Transition to Post-Fordism and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Roger Barrows et al. *Towards a Post-Fordist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 _____. 2000. "한국어판 서문",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한울.
- _____. 2002.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Polity Press.
- McGrew, A. et al, eds. 1982. *Global Politics: Globalizaion and the*

- Nation-State*, London: Polity.
- McLuhan, Marshall. 1996. *Understanding Media*, Routledge.
- McMichael, P. & D. Myhre. 1990. "Global Regulation vs the Nation-Stat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
- Mandell, Ernest. 1967. "International capitalism and 'Supranationality'," *Socialist Register*.
- Murray, M. 197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Nation-State," *New Left Review*, no. 67.s, 22:1.
- O'Donnell. 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1(Jan.)
- Offe, Claus.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IT Press.
- Pirages, Dennis. 1978. *Global Ecopolitics, North Scituate*: Duxbury Press.
- Porter, Gareth et al. 1991.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Boulder: Westview.
- Robertson, Ronal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Robin, Blackburn. 1991. *After the Fall*, London: Verso.
- Rosenvaig, E. 1997. "N다-Liberalism: Economic Philosophy of Postmodern Demol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November).
- Ross, Robert & Kent Trachte. 1990. *Global Capitalism: the New Leviathan*,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Univ.
- Ruescheymer, D. et al.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Press.
- Saul, John. 1974.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Tanzania," *Socialist Register*.
- Shaw, Martin. 2000. *The Theory of the Global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tiglitz, Joseph.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 W. Norton & Company.
- Sweezy, Paul 1994. "The Triumph of Finance Capital," *Foreign Affairs*(June).
- Toffler, E. 1990. 『제3의 물결』, 매일경제사.
- Tomas, Janet. 2000. *The Battle in Seattle*, Colorado: Fulcrum Publishing.
- Vernon, Ratmond. 1974. *Sovereignty at Bay*, NY: Basic Books.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Warren, Bill 197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Nation-State: a Comment," *New Left Review*, no. 68.

Waters, Malcom. 1995.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Weiss, Linda. 1998.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Global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Sonn Hochul

Professor,
Sogang University

Globalization has transformed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to the (dependent) neoliberal state. It also has failed to develop the limited political democracy in Korea into the full-fledged liberal democracy. Instead, it has introduced to Korea neoliberal police state in order to suppress the resistance of the working people against neoliberal policies.

Globalization tends to transform fordism and Keynesian welfare state into postfordism and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respectively. However, in Korea, even before globalization, there had been no Keynesian welfare state but a combination of Listian national competition state and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Globalization has replaced it with a combination of denationalized foreign capital inducing state and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and thereby replaced the domestic monopoly capital(chaebols) with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as its main class base.

Key Words: globalization, developmental state, neoliberal police state
denationalized foreign capital inducing state.